

# 고용청의 '갑질'...사업자·근로자의 '눈물'

지원금 받고 채용 늘린 사업장에 사전 안내 없던 서류 요구

“신청 방식 오류” 지급 거절...취업기회 놓치고 사업자도 손실

#.나주에서 영세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근로자 1명을 떠나보내야 했다. 정부의 고용촉진 지원제도의 하나인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40대 남성을 지난 4월 영입직원으로 채용, 5개월가량 근무시켰지만 약속했던 정부 지원금이 차일피일 늦춰지더니 결국 지난달 초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채용 3개월 뒤부터 임금의 75%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지원금은 나오지 않고 영업 실적까지 좋지 않아 해당 직원이 결국 일을 그만뒀다”면서 “애초 제출하기로 했던 증빙 자료를 모두 냈고 해당 직원이 '노동청까지 찾아가 힘들게 얻은 직장이니 근로관계를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한 고용·노

동·산재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섬세하지 못한 행정을 펼치면서 영세 기업주와 근로자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구직자 취업 장려를 위해 고용주에 주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는 사전 안내도 없던 증빙자료를 무더기로 요구하면서 근로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가 하면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린 사업장에 돌아가야 할 장려금을 신청 방식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례도 있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고용노동 분야 행정심판 건수가 지난 2012년 690건에서 2013년 924건, 2014년 1230건으로 매년 상승 추세다.

행정심판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

이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임을 감안하면 고용·노동·산재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만 표출이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

심·의결이 이뤄진 고용·노동사건의 인양도 2012년 180건(전체의 26.05%)→2013년 236건(→25.54%)→2014년 382건(→31.05%)으로 집계돼 접수된 '불만' 10건 중 3건은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애 '미숙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2013년 6월 자신의 양식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갑작스레 중상을 입자 고용주 A씨는 산재처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서를 냈다가 반려 당했다. 고용주 B씨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관련 자료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실제 고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B씨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를 5인 이하로 판단, 산재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이다”고 판단했다.

전북 완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C씨

도 20여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기존 단순 근무체제를 '교대' 근무제로 변경한 뒤 지난해 7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불복한 사업주 C씨는 지난 6월에야 국민권익위로부터 구제를 받았다. 사업주가 교대근무제를 '신규 도입 사업장'이 아닌 '확대 전환 사업장'으로 잘못 신청했지만 실제 고용인원이 늘었다면 이에 맞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등 누수를 막기 위해 증빙 자료를 철저히 요구하는 것이며 노동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청구 등 불복 제도를 이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한 노무사는 그러나 “불복 제도가 있지만, 기업주와 근로자 모두 피해가 없도록 노동청 등 행정기관이 보다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9 해질 17:25  
 맑음 12:15  
 맑음 23:22

우산 챙기세요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 늦게 그치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13/16 보성 12/15 순천 14/16 여수 13/16 영광 13/16 나주 13/16 진도 13/16 완도 13/16 진주 13/16 구례 13/16 군산 13/16 강진 12/15 남원 12/15 해남 13/16 옥산도 13/16 장성 12/16

◇바다 날씨  

지역	방향	파고(m)	방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5	북서~북 0.5~1.5	
	면바다	북서~북 1.0~2.5	북서~북 1.0~2.5	
남해	앞바다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면바다(동)	북동~동 1.5~2.5	북동~동 2.0~4.0	
서부	면바다(서)	북동~동 2.0~3.0	북동~동 2.0~3.0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낮음  
 체감온도 관심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6:05	11:15
	18:47	00:00
여수	밀물	썰물
	00:41	06:37
	13:24	19:51

◇주간 날씨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	☁	☁	☁	☁	☁	☁
11/16	9/16	7/18	10/18	12/15	10/14	8/13

수그르드는 교원 명퇴 열풍

광주·전남 내년 400여명 줄어

내년 명예퇴직하는 교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교육청은 17일 명예퇴직 수요조사서를 토대로 공립 유·초·중등 교원 명예퇴직 수당 23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명예퇴직 수당 지급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23명(초등 9명·중등 14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별도로 사립 중등 교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50억원(50명)이 편성해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공립 유·초등 교원 55명의 명예퇴직 수당으로 41억1600만원을 집행했고 66명의 공립 중등 교원에게도 54억3100만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사립 교원 148명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107억)도 집행했다. 올해 교단을 떠난 광주지역 공·사립 교원(269명)에 견줘 72.9%(196명)가 줄어든 셈이다.

전남도교육청도 비슷해 내년도 명예퇴직으로 214억(공립 183억원, 사립 31억원)을 편성, 이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신청을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 규모라면 220~230명에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에서는 올해 507명이 교단을 떠났다. 상반기에 663명의 공·사립 교원이 '명퇴' 신청을 했지만 497명만 받아들여졌고 하반기의 경우 공립 유·초등 교원 신청자 25명 중 2명이, 중등 교원 신청자 48명 중 3명, 사립에서는 중등 교원 15명 중 5명이 받아들여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요” 광주지역 어린이들과 김옥자 광주시의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전국 최초로 발의한 '광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통과를 축하하며 '놀이터를 지키자'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전국 첫 민간 '어린이 놀이터 지원조례' 만든다

지난 4월 광주 64곳, 전남 90곳 등 전국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1581곳이 한꺼번에 '이용금지 조치'와 함께 폐쇄됐다. 국민안전처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과 함께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일시적으로 이용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용금지 조치를 받은 어린이놀이터 대부분은 민간, 즉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었다. 전국에서는 최초로 광주에서 민간이 관

리하는 어린이놀이터에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조례안이 마련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와 김옥자 광주시의원 등은 17일 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조례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현행법상 공동주택이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사유지로 간주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지자체가 설치검사나 정기시설검사 등에 불합격해 이용 금지된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시설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리 및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수리·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수능 끝난 고3 대상 '안보 콘서트'

미래안보교육문제연구소

미래안보교육문제연구소는 17일 오전 광주 서석고에서 수능시험이 끝난 3학년 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통일안보콘서트'를 개최했다.

연구소는 이날 학생들에게 6·25 전쟁의 진행과정과 장진호 전투의 전개 과정 그리고 흥남철수작전 등을 설명하며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탈북자와의 대화를 통해 현재 북한 인권실태와 주민들의 실상을 전했다.

연구소는 이날 첫 행사를 시작으로 다

을말까지 광주·전남 12개 학교에서 '나라사랑 통일안보콘서트'를 진행한다.

콘서트와 함께 고3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진호 전투에 참가했던 생존 미군들의 모임인 '초신(Cho Sin) 푸'에 보낸 영문 수 편지를 공모하고 있다. 편지에는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미군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초신 푸'라는 이름을 '장진 푸'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을 담으면 된다. 연구소는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고, 내년 7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열리는 '장진호전투기념비제막식'에서 이 편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세월호특조위, 단독으로 선체 조사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단독으로 세월호 선체조사에 나선다.

세월호 특조위는 해양수산부와 세월호 인양업체가 선체 조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함에 따라 18~22일 바닷속에 있는 세월호의 선체를 단독으로 조사하고 영상도 촬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특조위는 조사를 더 미루면 선교(배지휘부) 내부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날씨 등의 여건 때문에 수중조사

활동 자체도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사에는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회장을 비롯한 특조위 직원 13명과 잠수사 6명, 기술인력 3명, 자문 전문가 1명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조타기와 계기판 등 관련 기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선체 안팎이 손상을 입었는지 확인하려면 인양하기 전에 세월호 선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연합뉴스

**jtbc GOLF** 2015 골프아카데미 왕중왕전 메인 협찬사

10월 임의고객 이벤트 진행중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전국 300곳 골프장 무기명 선불카드**

**그린피 “전액무료”**

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진리.광주지사상품** (수도권 및 부산, 대전상품 상이하니 별도문의 바랍니다.)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트윈	670만원	무기명 2인	3년	총 80회 (년 30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그린피(세금포함) + 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총 160회 (년 60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S-VIP	1,320만원	무기명 4인				

\* 해당 골프장과는 무관하며 에스골프는 부킹몰(주)에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 VAT포함 금액

**보존형 상품안내 (100% 무이자)**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S-트윈	보증금 : 3,000만원 입회금 : 660만원	무기명 2인	5년	총 120회 (년 24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그린피(세금포함) + 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총 245회 (년 48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SS-VIP	보증금 : 6,000만원 입회금 : 1,320만원	무기명 4인				

\* 보증금은 5년 만기시 무이자로 반환되며 입회금은 소멸되는 금액입니다.

**에스골프**

**에스투어**

해외 골프투어

**동남아 원하시는 곳 어디나 가능!!**

**“총 50박 무료!!”**

**동남아시아** (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구분	분양가	회원구성	이용기간	회원혜택(무료)
S-투어(싱글)	297만원	기명1명	5년(년10박)	1박 18홀 기준 전액무료 <small>불포함사항 항공료(TAX, 유류할증료), 석식, 카트비(캐디비, 캐디팁)외, 별도 추가비용</small>
S-투어(트윈)	495만원	기명1명+ 무기명1명		
S-투어(VIP)	880만원	기명1명+ 무기명3명		

\* 상기 금액은 VAT포함 금액

**문의전화 062-415-8811**

**지 사** 서울(수도권지역) 1566-9799 경남(경남,부산지역) 051) 916-7070  
 대전(충남,대전지역) 042) 320-7800 부산(경남,부산지역) 051) 916-9700  
 대구(경북,대구지역) 053) 248-6666 울산(경남,부산지역) 052) 260-4575